

국정과제 :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

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

2022. 9. 26.

금 융 위 원 회
공 정 시 장 과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향후 정책 방향	5
1. 자본시장 거래제한	6
2.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	9
3.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	11
IV. 향후 계획	12
[참고1] 국내외 유사제도 사례	13
[참고2] 해외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	14

I. 추진 배경

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·복잡화*되고 있으나, 그 처벌·차단·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

* (예)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,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(이른바 '무자본 M&A')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,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

- 특히,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

→ 다수 일반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및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을 초래

<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>

- ◎ **(미공개정보이용)** 코스닥 상장사인 A社の 임원진(대표이사, 사내·사외이사), 그 친인척,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(유상증자*, 전환사채 발행)가 공개되기 2달~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

* 임원진은 가공매출 생성 및 허위공시를 활용하여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모집 (→부정거래도 해당)

- ◎ **(시세조종)**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·기소유에 조치를 받았던 전업 투자자 甲,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*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

* 가족·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하여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

- ◎ **(부정거래)**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,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 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, 상장 임박설을 유포

- '22.5월, 정부는 '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'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

- 그 동안 정책세미나,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

- ▶ '22.6.17일, 「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」 정책세미나 (금융위 부위원장 참석)
- ▶ '22.7.26일,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(금융위 부위원장 주재)

Ⅱ. 현황 및 문제점

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율 현황

- **(개념)**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행위를 통칭
- (3대 불공정거래) 미공개정보 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
 - (시장질서교란) 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,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('15.7월 도입)
 - (기타) 무차입 공매도, 내부자거래 규율을 위한 각종 의무 등
 - *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(§172), 임원·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(§173),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및 중요정보 누설 금지(§173의2)
- **(제재체계)** 형사처벌(징역, 벌금, 몰수·추징) 위주로 규정
-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하며, 시장질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과징금 부과 가능
 - * 다만, 금융투자업자(임직원 포함)에 대해서는 행정제재(인가취소, 신분상 조치 등) 가능

<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제재>

유형		내용	제재	
			형사처벌	행정제재
3대	미공개정보 이용 (§174)	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회사의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	○ (징역, 벌금, 몰수·추징)	×
	시세조종 (§176)	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		
	부정거래 (§178)	풍문 유포, 중요 정보 부실표시 등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(포괄적 사기금지)		
시장질서교란 (§178의2)		3대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,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(정보이용형, 시세관여형)	×	○ (과징금)

2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

- **(개요)** 최근 5년간('17~'21)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'증선위')*에 상정·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, 연 평균 54.8건 수준

*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,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·의결기구

- **(위반행위별)**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(43.4%), 부정거래(29.6%), 시세조종(23.4%), 시장질서교란(3.6%) 順

< 최근 5년간('17~'21)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: 위반행위별 >

위반행위	3대			시장질서교란	합계
	미공개정보	시세조종	부정거래		
건수(건)	119	64	81	10	274
비중(%)	43.4	23.4	29.6	3.6	100.0

※ 동일 사건에 복수 유형 중복 시, 부정거래→시세조종→미공개정보이용→시장질서교란 順 분류

- **(조치별)** 고발·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(93.6%)을 차지

< 최근 5년간('17~'21)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: 조치별 >

위반행위	3대(미공개정보, 시세조종, 부정거래)		시장질서교란	합계
조치	고발·통보	고발·통보 + 행정조치*	행정조치 (과징금)	
혐의자수(인)	1,006	22	47	1,075
비중(%)	93.6	2.0	4.4	100.0

* 금융투자업자 제재(직무정지, 해임요구, 기관경고 등), 과태료 등

3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문제점

- ① 제재의 적시성 미흡 : 처리기간의 장기화

-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(평균 2~3년) 소요되며,
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

<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 >



② 제재의 **실효성** 미흡 :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위

- 형사처벌은 그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고¹⁾,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(집행유예 사례 多²⁾)

* 1) 고발·통보된 사건('16~'20년, 수사완료건 기준) 중 불기소율 : 55.8%

2)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('20년) : 실형 38명(59.4%), 집행유예 26명(40.6%)

③ 제재의 **억지력** 미흡 : 높은 재범율

- 형사처벌 外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 한계

※ 해외 주요국(美, 英, 홍콩, 캐나다 등)도 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 중

→ 이에 따라,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 발생

*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(증선위 조치 기준)

: ('19) 17명/110명(15.4%), ('20) 28명/98명(28.5%) ('21) 21명/99명(21.2%)

④ **불법이익 환수** 미흡 : 과징금 제도 미활성화

- 불공정거래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인 바,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

→ 불공정거래(3대)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, 법상 부당이득 산정 기준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불법이익 환수가 어려움

* '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을 신설했으나, 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만 적용

◇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·복잡화되고 있으나, **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**하여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

⇒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**제재수단을 다양화**하여 **대응역량을 대폭 강화**

Ⅲ. 향후 정책방향

목표

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

기본
방향

자본시장 불공정거래 **제재수단 다양화**를 통해
시장질서 훼손 및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
발생시키는 **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**

※ 관련 국정과제

36.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
: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

정책
과제

◆ 악질적·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**사전에 예방**하고 **건전한
시장질서**를 확립

- ① 자본시장 거래제한
- ②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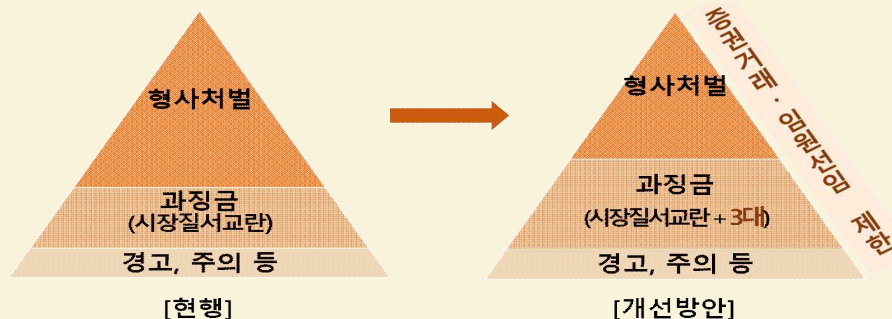
◆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불법적인 **경제적 이익 박탈** 강화

- ③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법제화

기대
효과

◆ **민고 투자**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

◆ 갈수록 다양화·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위반행위의
특성·정도에 따라 **적시에 탄력적**으로 대응



◇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(최대 10년) 동안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

⇒ 불공정거래 시도 자체에 강한 경종을 울리고, 악질적·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

□ **(거래제한 대상)**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^①을 위반한 자로서 거래제한 대상자(이하 '제한 대상자')로 증선위에서 지정^②한 자

① 3대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정보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), 시장질서 교란행위, 무차입 공매도,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 포함

② 고발·수사기관 통보와 별개로 금융당국(증선위)의 독자 판단 하에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부과

□ **(거래제한 범위)** 자본시장 內 금융투자상품^① 신규 거래^②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되, 일부 예외를 허용^③

* 세부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

① (금융투자상품) 증권(주식, 주식관련 사채 등), 파생상품 등 자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, 상장여부를 불문

② ('거래'의 의미)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¹⁾으로 행하는, 직·간접적인²⁾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

* 1) 예 : 지인 명의 계좌, 투자조합, SPC, 특정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거래

2) 장내/장외 주식·파생상품 매수, 주식 대여·차입 등

③ (예외) 既 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,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,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

* 예: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, 既보유 상품 매도, ETF 등 간접투자,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

□ **(거래제한 기간)**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

○ 제한기간의 법령상 최대 상한은 형벌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,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'10년'으로 설정

* 해외 주요국 거래 제한기간 상한 : (캐나다) 없음 (홍콩) 5년 (독일) 2년
통신사기피해환급법 : 보이스피싱 사범의 전자금융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

○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, 정도, 기간, 횟수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차등화 (세부 조치기준 마련·운영)

□ **(조치예정자 권익보호)** 조치예정자에 대해 사전통지·의견제출 기회¹⁾(조치 심의 단계) 및 이의신청권²⁾(조치 후)을 부여

* 1) 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·의견제출 기회, 증선위 회의 출석·의견진술 기회 부여
2)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 이의 신청 가능

□ **(형벌과의 관계)** 형벌과 별개로 증선위 독자 조치가 원칙이나, 고발·통보 조치에 병과되는 경우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

○ **(효력발생)** 형사절차 진행상황(검찰 결정, 법원 판결)과 무관하게 증선위 의결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조치의 효력 발생

* 형사처벌 확정(평균 2~3년 소요)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경우, 제재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너무 낮아 제도 도입취지 달성이 어려움

○ **(재심의)** 법원 무죄판결,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·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·감경 가능

-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

□ **(거래제한 실행절차)** 증선위는 거래제한 대상자 정보를 증권사에 통보^① → 증권사, 거래 거부조치^② 및 결과 보고^③

① (증선위→거래소→증권사) 증선위는 대상자 정보*를 거래소에 송부,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쏘 증권사에 전파

*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정보(성명, 주민번호), 보유계좌 정보, 거래제한 기간 등

② (증권사 조치) 증권사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 확인 및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

③ (증권사→거래소)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소*에 제출

* 거래소는 매매데이터 대조를 통해 실제 조치여부 확인 및 검증



☐ **(실효성 확보)**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, 증선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

○ (정보공표)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(대상자 인적사항, 위반내역, 거래제한 기간 등)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

* (해외) 미국, 캐나다, 홍콩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(국내)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(국세기본법) 등 유사 입법례 존재

○ (금융회사) 증선위로부터 통지받은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 거래를 처리하지 않을 의무 부과

○ (과태료) 거래제한 대상자의 거래 발생 시,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

* 다만,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 (형벌, 과징금 등)

☐ **(조치사항)** 자본시장법 개정

◇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(최대 10년) 동안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선임 및 활동 제한

⇒ 시장 파급력 및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중요 행위자로서의 활동을 제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

□ **(선임제한 대상)**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임원 선임제한 대상자(이하 '제한 대상자')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자

○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을 포함 ('자본시장 거래제한'과 동일 ☞p.6)

○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 가능

*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,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有

□ **(선임제한 범위)**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이 제한되며,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를 상실

○ 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 시장 쉰 상장사에 적용되며,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불문

○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¹⁾과 동일하게 '이사, 감사 및 사실상 임원(업무집행책임자²⁾ 등)'을 포함

* 1)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,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

2) 회장, 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

□ **(선임제한 기간)**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 ('자본시장 거래제한'과 동일 ☞p.7)

* 해외 주요국 임원선임 제한기간 상한 : (美) 없음 (홍콩) 5년

금융회사지배구조법 : 금융관련법 위반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

** 선임제한 조치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(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)

- **(조치예정자 권익보호)** 사전통지·의견제출 기회 및 이의신청권 부여 ('자본시장 거래제한'과 동일 ⇨p.7)
- **(형벌과의 관계)** 형벌과 별개의 독자 조치로 운영하되, 형사절차와의 조화를 위해 **재심의 절차** 마련 ('자본시장 거래제한'과 동일 ⇨p.7)
- **(실효성 확보)**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, 상장사에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공시의무 부과
 - **(정보공표)**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공표 ('자본시장 거래제한'과 동일 ⇨p.8)
 - **(상장사)** 상장사는 소속 임원의 선임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, 정기적으로 공시(사업, 분·반기보고서)토록 의무 부과
 -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, 당해 제한 대상자 및 상장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임원 해임권고 조치
- **(조치사항)** 자본시장법 개정

- **(부당이득 법제화)**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(총수입 - 총비용)을 법률에 명시

- 다만, 행위자가 제3자 개입,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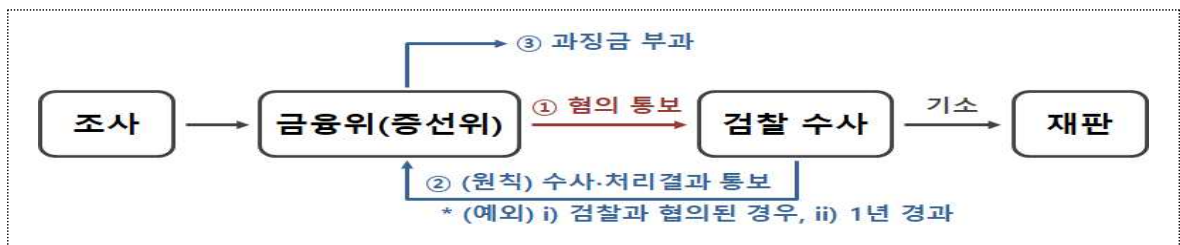
< 불공정거래 제재 부과기준 >

구분	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부과기준
징역·벌금 (현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~5배 이하의 벌금 (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, 5억 이하의 벌금) ○ (가중) 부당이득액 5억↑ → 3년↑징역 / 50억↑ → 5년↑징역
과징금 (개정안)	○ 부당이득액의 2배(산정곤란시 50억)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

- **(과징금 도입)**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(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) 신설

-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·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
- 다만, ⁱ⁾검찰과 협의 또는 ⁱⁱ⁾1년 경과 시에는 검찰로부터 수사·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과징금 부과 가능
-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,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

< 금융위(증권위)의 과징금 부과절차 >



- **(조치사항)** 자본시장법 개정 (→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)

* (부당이득 법제화) '20.6월 박용진 의원안 / (과징금 도입) '20.9월 윤관석 의원안

IV. 향후 계획

☐ **(거래·임원선임 제한)**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

- 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(연내)

☐ **(부당이득·과징금)**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*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 적극 지원

* (부당이득 법제화) '20.6월 박용진 의원안 / (과징금 도입) '20.9월 윤관석 의원안

참고1

국내외 유사 제도 사례

1. 국내

구분	제도 내용
■ 거래 제한	
테러자금금지법 (제4조)	▶ 금융위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·고시 →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
통신사기 피해환급법 (제4조, 13조의2)	▶ 금융회사는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▶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→ 전자금융거래 금지(최대 5년)
신용정보법 (제2조 제1호의4)	▶ 금융회사는 대출·보험사기 등을 범한 자를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→ 신용등급 하락, 카드거래 정지, 대출 금지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(최대 12년)
■ 임원선임 및 취업 제한	
상법 (제542조의8)	▶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(자본시장법 포함) 위반으로 해임·면직된 경우 2년간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
금융사지배구조법 (제5조)	▶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(자본시장법 포함)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(해임 등)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
특정경제범죄법 (제14조①)	▶ 횡령·배임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, 국가출연기관,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에 5년간 취업 불가

2. 해외

구분	해외제도 현황
자본시장 거래 제한	▶ 캐나다, 홍콩, 독일, 영국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* (캐나다) 제한 없음 (홍콩) 최대 5년 (독일) 최대 2년 (영국) 일시적
임원선임 제한	▶ 캐나다, 홍콩, 미국, 호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·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* (홍콩) 최대 5년 (미국) 제한 없음 (호주) 법원이 정하는 기간
제재내역 공개	▶ 캐나다, 홍콩, 영국, 미국 금융당국은 제재내역을 시장 일반에 알려 시장규율 작동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자 퇴출을 유도
과징금	▶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, 일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민사제재금(civil penalty)/과징금 부과 가능

* 미국, 영국,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사법부와 협조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행정제재 가능

참고2

해외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

① Elizabeth Holmes(Theranos CEO) 사건(미국)

- Elizabeth Holmes(바이오타트업 기업 美Theranos CEO)는 “피 한방울로 수천개의 의학적 실험(질병 진단 등)을 할 수 있다”는 취지의 허위·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, 미화 7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
- 2018.3.15. 美금융당국(SEC)은 美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Elizabeth Holmes에 대해,
→ 50만불의 금전제재, 보유주식(1900만 주) 처분명령 및 10년간 공개기업 임원선임 금지 조치

② Caroline Danforth 사건(캐나다 British Columbia州)

- Caroline Danforth는 미등록 거래, 투자설명서(prospectus)를 제출하지 않은 증권의 유통,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권의 거래행위, 유가증권의 인위적인 가격 형성 등을 인정
- 2022.6.14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州 금융당국(BCSC)은 Danforth에 대해
→ 영구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제한(Cease Trade Order), 영구적으로 금융당국 등록법인 임원선임 제한,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사임 등 조치

③ Samantha Keung Wai Fun(“Keung”) 사건(홍콩)

- China AU Group Holdings Limited(“China AU”)의 전 최고경영자(CEO) Keung은 14개의 증권 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상당량의 China AU 주식을 사고팔아 China AU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듯한 외관을 창출
- 친구 Wu Hsiu Jung, 사업 파트너 Chen Kuo-chen은 Keung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Keung과 함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음
- 2018.8.3 홍콩 금융당국(SFC/MMT)은 Keung에 대해
→ 4년간 상장법인의 임원선임·경영참여 제한(Disqualification Order), 4년간 증권 및 선물 거래 제한*(Cold Shoulder Order), 중지명령 (Cease and Desist order) 조치

* Wu와 Chen에 대해서는 각 3년, 2년